

이슈분석

노사관계 2002년 평가와 2003년 전망

이주희*

I. 2002년 노사관계의 평가

◆ 2002년 노사관계 개관

- 주 5일제 등 주요 법 제도 개선과제가 노사정의 의견차이로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이 저하되고 이후 노사관계 전개에 부담으로 작용
- 노사분규수가 이전 해에 비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공권력 투입은 자제된 한편 사용자측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가 급증, 새로운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하였음.
- 산별 조직화와 교섭이 진전됨에 따라 교섭구조 집중화의 추세가 이전보다 뚜렷하여졌으며, 지방선거와 대선을 통해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가 본격화

◆ 법·제도 개선과제 타결 부진

- 주 5일 근무제 노사정위 합의 실패
 - 2002년 가장 주요한 제도개선 과제로 집중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주5일 근무제의 연내도입이 2년여의 노사정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무산되었음.
 - 정부가 합의실패 이후 마련한 단독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노동계와 경영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lee@kli.re.kr).

계 모두 정부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여 대선의 영향으로 회기가 단축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임.

○ 비정규직 보호방안 실질적 합의 미진

- 노사정위 내 비정규특위는 비정규근로자 관련 통계개선, 근로감독 강화, 그리고 사회보험 확대적용 및 직업훈련기회 확대 등 복지확충방안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으나,
- 비정규직 보호관련 구체적인 법·제도개선의 방향과 방안 제시는 아직 미진함.

○ 공무원노조 허용범위 논란

- 공무원 기본권과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일부(협약체결권)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조합의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
- 정부안이 공무원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뿐 아니라 특히 다른 노동단체와의 연대금지 조항 등은 과거의 제3자 개입금지와 마찬가지로 노동기본권의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법외노조로 존재하는 두 공무원단체는 강력히 반발하며 입법 저지투쟁을 전개

○ 경제자유구역법 노동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과

- 경제자유구역법(구 경제특구법)이 생리휴가 및 주휴 무급화, 월차휴가 적용배제, 전문업종 파견대상업무 확대 및 기간연장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조항이 포함된 채 국회에서 최종 통과
- 노동계는 근로조건 저하와 노동권 약화를 가져오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모색

○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개선 요구

- 병원과업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가 사용자측의 교섭회피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
- 파업권과 공공이익의 조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나, 노사정위 노사관계소위에서는 필수공익사업과 관련된 논의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문 제기

-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논의가 부진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 양 측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

◆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 전개

- 공공3사 노동조합, 민영화 반대 파업 실시
 - 2002년 초 발전, 철도, 가스공사노조는 공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연대파업투쟁을 실시
 - 특히 발전노조는 타 노조에 비해 장기간(38일) 진행된 민영화 반대 파업을 통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제고하였으나, 불법파업에 대한 구속과 손해배상 등으로 조직력에 큰 타격을 입었음.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불안정성과 취약성 노출
 - 공공부문 사용자측의 일반적 노사관계 관리능력이 매우 취약한 가운데, 공공부문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된 구체적 합의와 설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
 - 공공부문 노조 연대투쟁에 관여하였던 민주노총과 공공연맹도 지도부 사퇴 등 내부분열을 겪었으며, 이 역시 이후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협약임금인상률 전년 대비 다소 증가

- 경기회복으로 협약임금인상률 상승
 -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2001년 경기둔화로 6%로 저하되었다가 경기회복과 기업의 경영실적 호전에 따라 2002년에는 6.7%로 상승
 - 한편, 명목임금상승률은 2001년 5%의 두 배가 넘는 10.6%를 기록
 - 그러나 이러한 높은 임금인상률이 주로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됨에 따라 기업의 총 인건비 증가율은 명목임금상승률보다 낮을 수도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임단협 진행은 금융위기 이후 이전에 집중되었던 3-6월 이외의 시기로 점차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2년에도 6월 실시된 월드컵의 영향으로 이런 경향이 지속

◆ 산별 조직화 및 교섭 진행

- 산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전환 추세
 - 산별 조직화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02년 6월

- 말 기준으로 이 노총 산하 41.1%의 조합원이 24개의 산별 노조에 소속
- 양 노총 모두 현재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업별 노조로 개편하겠다는 조직방침을 가지고 이를 실행해 가고 있으며 이미 조직형태 전환을 이룬 노조들은 산별 교섭을 본격적으로 준비중임.
 - 그러나 직종별, 업종별 조직구조상의 다양성(사무금융노련), 기업규모별 차이(금속노조), 기존 기업별 노조 조직의 영향력(금융노조) 사용자의 반대(보건의료노조) 등의 영향으로 산별 노조로의 전환 혹은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별 교섭, 사용자와의 갈등 속에 일부 진전

- 산별 교섭은 상대적으로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동질성이 크고, 이전부터 산별 교섭의 전통을 가진 금융부문에서 순조롭게 진행, 금융노조는 산별 교섭의 전 단계로 여겨지는 집단교섭을 통해 금융산업에서의 주 5일제 실시를 합의
- 금속노조는 2001년 약 70개 사업장에서 2002년부터 집단교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 2002년 산별노조 단일협약의 최소한의 틀을 구성한 ‘기본협약’에 대해 10월 현재 임단투를 추진한 124개 사업장의 85.1%인 106개 사업장에서 합의를 얻어내었음. 그러나 두산중공업 등 일부 사업장에서의 사용자측 반발로 교섭과 관련된 장기파업이 유발
- 보건의료노조는 1994년부터 병원협회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하였으나 2002년에 이르기까지 공동 요구안에 기초한 대각선교섭을 뛰어넘는 교섭구조변화는 얻어내지 못하였음. 2002년 5월 동시파업으로 산별교섭실시를 위한 투쟁에 들어갔지만, 경희대병원, CMC 등 사업장차원에서의 사용자 거부와 반대로 장기파업이 지속
- 사무금융노련 산하 증권사 노조 10개 지부의 경우 2001년 통일단협 체결 이후 2002년에는 사용자측이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증권사노조와 경총간의 교섭이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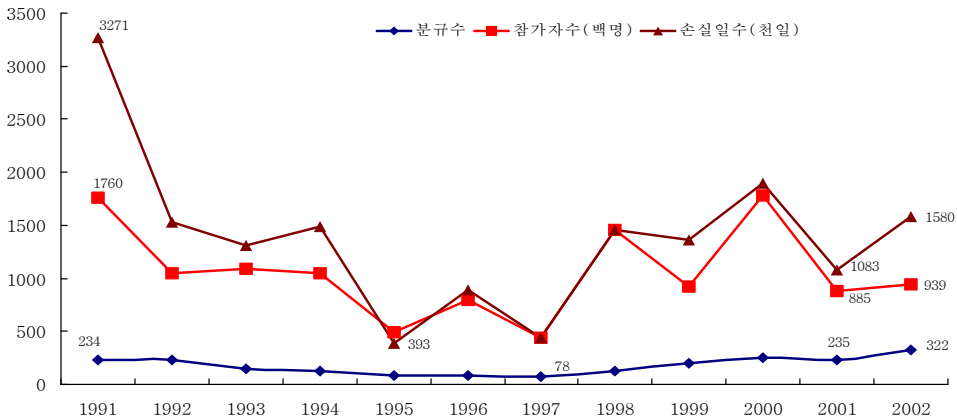
◆ 노사분규의 증가에 대한 정부 및 사용자의 대응양상 변화

- 법·제도개선과제를 둘러싼 갈등과 공기업 민영화, 그리고 산별 교섭실시 과정에서 2002년 노사분규수가 전년도인 2001년에 비해 크게 증가(그림 1 참조)
 -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322건의 파업발생건수를 기록하였으며, 장기파업사업장의 영향으로 근로손실일수 역시 가장 높은 기록을 가졌던 2000년에 접근하면서도 분규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참가자수는 2001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

지

- 노사분규수가 증가하고 또 장기화된 이유는 주요 분규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민주택시연맹과 같이 다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교섭구조와 임금체계개편 등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하는 노사관계의 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사안 위주로 발생되었기 때문
-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감소,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는 증가(표 1 참조)
 - 노동계가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른 불법 총파업 참여보다는 임단협 시기를 이용하는 시기집중파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통계상의 불법분규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구속 근로자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자제되는 반면, 노조의 불법파업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가 누적되어 점차 노사관계의 주요 갈등유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노동계는 구속자 수 증가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노동조합활동을 압박하는 새로운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본격 대응과 투쟁 시작

[그림 1] 노사분규 추이(1991-2002)



자료: 노동부

<표 1> 불법 노사분규 발생 추이 및 관련 통계

	1998	1999	2000	2001	2002
불법 노사분규 비율 ¹⁾	43	48	27	23	20
구속 근로자수	219	129	97	221	200
공권력 투입건수	10	1	6	4	2
손해배상 청구액 ²⁾	-	-	19,043 (20)	20,994 (20)	12,769 (17)
가압류 청구액 ²⁾	-	-	20,497 (12)	32,892 (14)	55,394 (21)

주: 1) 총 노사분규건수 중에서 불법 노사분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
 2) ()안은 해당업체수; 청구액의 단위는 백만원.

◆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 진전

○ 민주노동당의 지지율 증가

- 민주노동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투표지지율 8.1%를 획득, 자민련을 제치고 제3당으로 부상
- 대선에서도 1997년 1.2%에 그쳤던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3.9%로 증가

○ 그러나 아직 핵심 지지세력인 노동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매우 낮은 득표력을 보이고 있음.

II. 2003년 노사관계 전망

◆ 정치경제적 배경

○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구(IMF)등 주요기관이 2003년 경제성장률을 5.7~5.9%로 전망

-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3.4% 안팎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예측된 경제성장률이 유지될 경우 실업률은 2.9%, 경제활동참가율은 61.5%로 추정되나, 고용구조의 개선가능성은 낮음.

○ 새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기조와 노사의 입장

- 이전 정부의 경제 및 노동정책의 기본 틀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사관계 제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증가를 통해 진일보한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완화,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의 실시가 기대됨.
- 노동계는 개혁적 노동정책의 전개를 기대하면서도 시장개방과 민영화 등 세계경제의 추세, 여소야대 정국, 해당부처 공무원의 비협조와 부처간 이견조율의 어려움 등 정치행정구조상의 제한점, 개혁세력의 주변화로 인한 추진역량 부족, 그리고 조직노동자의 양보가 일부 요청되는 노동시장개혁방향에 대해 우려하며 공세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주 5일제 등 민감한 제도개선과제 등을 둘러싸고 새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어떻게 조율되는가에 따라 이후 관계 설정이 영향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전과 비교하여 다양한 대 정부 대화채널을 보유하고 활용하리라 여겨짐.
- 경영계는 새 정부를 일단 친 노동적이라고 규정하고 2003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전망하며 입법부 등 행정부 이외의 다른 통로를 통한 경영계 정책역량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제도 개선 쟁점

- 주 5일 근무제 2003년 초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의 주요 변수
 - 주 5일제의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추진이 기대되나 노사 모두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노동계에서는 제조업 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단축과 휴일휴가조정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며 현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투쟁을 결의
 - 그러나 이후 논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주 5일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 모두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보장하기 힘들고, 또 국회통과와 관련 없이 단협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대기업을 위주로 주5일제 실행이 진전됨에 따라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근로조건상의 차별과 격차는 더욱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 임시국회의 법안심의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주 5일제 관련 공약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최종적인 노사간 의견교환과 수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얻어냄으로써 빠른 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정규직 보호와 노동시장에서의 형평성 제고방안 논의 지속
 - 새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균등처우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차별금지조

항을 삽입하고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원칙의 강제와 이행, 그리고 구체적인 보호방안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 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은 법제화나 행정지도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조직화 혹은 정규직 노동조합의 임금과 단체협약 적용 확대를 통해서도 일부 가능한 만큼, 정규직 노동운동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됨. 현재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1% 미만이며, 정규직 노조의 규약과 단체협약에 비정규직 노조 가입자격을 명시한 경우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13.5%,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7.5%에 불과(2002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 공무원 기본권보장 상반기 법제화 가능성
 - 공무원 기본권 관련 법안은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조합 명칭 허용과 조기시행(2003년 7월)방침, 단체교섭권의 보장 등 진향적인 공약이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될 경우 무리 없는 해결이 가능
 -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사법조치되거나 징계된 공무원의 구제문제와 관련된 노정갈등이 전개될 수 있음.
- 기업연금 도입방안 쟁점화
 - 기업연금 관련 법안은 가을 정기국회 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노사정위를 통해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
 - 퇴직금제와 기업연금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제도로 도입하고, 제도의 형태도 확정금부형과 확정각출형(확정기여형) 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노동계는 기업연금제 도입보다는 퇴직금제의 전 사업장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업연금 기여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기업연금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만큼 노사정의 이견 조율이 필요
-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개선요구 지속
 - 직권중재제도를 둘러싼 파업발생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권의 제약 대상범위를 '업무' 중심으로 구체화 및 축소하고 필수업무에 대해서는 직권중재제도를 유지하되 중재회부 절차 및 중재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필요함.
- 경제자유구역법 통과에 따른 노동계 반발 예상
 - 경제자유구역법 실시를 저지하기 위해 인천, 부산 등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반대투쟁이 예상된다.

-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경영계의 반발예상
 - 그동안 외국인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양산하였던 산업연수생제의 대안으로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추진할 예정
 -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과정에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의 효율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

◆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부상과 공기업 구조조정 전망

- 공공부문 노조의 공기업 민영화 반대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인정논란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핵심세력으로 등장
 - 공공부문 노조는 전체 조직노동자의 30%가량을 차지하며, 세계시장에의 경쟁노출정도가 사부문보다 낮아 노조활동이 경제조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음.
 - 공무원 노조 결성이 본격화되면 전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조직규모가 크게 확대 가능
-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노정갈등 요소 상존
 - 새 정부는 철도, 전력, 가스 등 기간 망(네트워크) 산업 민영화에 대해 민간독점의 폐해와 노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리라 예상됨.
 - 그러나 이미 매각일정이 잡혀 진행중인 남동발전의 민영화는 계획대로 추진 중이어서 매각이 구체화되면 발전노조가 연대투쟁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력 배전 부문은 분할의 예비단계인 사업부제 방식의 도입이 4월 계획되어 있어 노사가 대립
 - 현재 입법 보류된 산자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법안과 아직 국회법안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철도구조개혁법은 새 정부가 재검토할 수 있음. 한편 철도노조는 2002년 발생한 징계 및 사법조치 최소화와 합의사항의 이행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조치가 요구됨.
 - 사업장 노사관계 진단 및 자문을 통한 상시적 노사갈등관리체제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사용자의 노사관계 이해 및 대처능력 향상
 - 대정부 직접교섭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핵심 요구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정부 내 교섭관련 유관부처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부처간 협의능력 제고

◆ 임단협 전망

- 임금은 대체로 2002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타결 전망
 - 2003년의 경제성장률이 2002년의 6%대보다 낮은 5%대로 예측되고 물가안정세가 지속되는 한편 경기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2003년의 협약임금인상률은 2002년의 6.7%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리라 예상됨.
 - 그러나 지불능력에 따른 기업간 격차는 존속 혹은 확대될 가능성이 큼. 고용조정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존의 장기고용관행이 위협받음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에서 분배교섭 의지는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띄고 있는데, 특히 노조의 교섭력과 경영실적이 모두 높은 사업장의 경우 단순한 임금인상률보다는 성과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시간단축 및 휴일·휴가조정이 논의
 - 주 5일제가 법제화된 경우 단협상의 휴일·휴가조항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협개정을 둘러싼 어려움이 예상됨.
 - 입법화가 연기된 경우 개별 기업차원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조와 사용자의 갈등이 증폭되어 사업장 차원의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인사 및 노무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한 2002년 말 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유보조항을 두거나 임금조정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입장, 혹은 절대수용불가입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음.
- 단체협약을 통한 비정규직 이해대변 노력 증가
 -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2003년 주요 사업계획의 하나로 하청, 서비스, 특수고용, 지자체, 건설일용 등 5대 핵심 사업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계획
 - 이와 더불어 임단협 교섭을 통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 금지조항과 사업장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조항을 단체협약에 보장하도록 요구
- 법·제도개선과제의 해결 정도와 내용에 따라 임단협 시기 노동계의 요구 및 분류의 수위가 결정되리라 예상됨.

◆ 단체교섭구조의 변화

○ 노동계 산별 조직화 추진 지속

- 민주노총은 2003년 말까지 조합원의 약 80%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민주화학섬유연맹과 사무금융노련은 연내 조직전환을 적극 시도할 예정
- 한국노총의 개혁특위도 현재 28개로 분산된 산별 연맹의 5대 대형 산별 연맹체제 개편을 주장
- 또한 노동계는 이미 산별노조가 구성된 경우 사용자에게 산업별 통일교섭에 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

○ 노동계, 다층적 교섭체제 확보 노력

- 노동계는 산별 교섭 외에도 국가적 차원의 교섭채널의 확보를 위해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정위의 활성화를,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노사정위의 대폭 개편, 혹은 노사정위 이외의 새로운 노정 및 노사정 교섭채널을 요구하고 있음.

○ 노사정위원회의 활동영역의 확대와 개편방향

- 새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사회협력기구로 격상시켜 경제사회 전반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추진
- 다양한 사회적 의제의 개발과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사안마다 협의사항과 합의사항을 구분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합의안건의 범위 및 시한의 제한, 공익위원의 역할 강화 등도 개편방안으로 논의 중임.
-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적 합의주의의 기본조건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특히 이해당사자에게 상호간 참여의 혜택을 인식시켜 이해차이를 조율하고 약속을 지키는 등-이 필수적

◆ 산업별·업종별 노사관계 현안

○ 금융: 조흥은행 매각, 제2금융권 구조조정, 비정규직 조직화

- 조흥은행 매각이 본격화 될 경우 금융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 제2금융권은 증권산업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수 및 합병을 실시, 선도 투자은행을 이끌어 낸 후 부실 중소기업의 업계 퇴출을 유도하는 구조개편 진행 예정

- 금융노조는 2003년 말까지 3만명의 금융권 비정규직 조직화를 목표로 비정규직 조직화 특별위원회(가칭)을 조직하였음. 전체직원의 약 30%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 병원: 노조의 조직정비와 직권중재제도 철폐 및 산별 교섭관련 투쟁
 -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장기파업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조직력 복원을 위한 내부 조직 정비가 필요
 - 직권중재제도 철폐, 비정규직 보호, 구조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예정
 - 2002년 이루지 못한 산별 협약안을 마련하여 산별 교섭 관철을 시도
- 화학 및 섬유: 여천과 구미지역 중심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보장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예상된다.
- 금속: 산별 교섭과 주 5일제
 - 금속노조는 미가입노조의 산별 노조의 지부 전환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단협을 공동으로 요구하는 등, 2002년에 이어 산별교섭체제 구축을 시도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주 5일제 입법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의 주요 동력으로 참가하여 상반기 투쟁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음.
- 택시: 월급제 실시

◆ 활발한 노동계 정치활동 예상

-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 대비 활동
 - 민노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
- 진보정당 정치세력화를 위한 혁신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 사안별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조직기반을 확대
 - 새 정부 정치개혁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혁 의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
 - 사안별 새 정부와의 정책연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타진할 필요가 있음.

◆ 노사정의 과제

○ 노동계

-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노동운동의 대표성 제고
- 노동계 내부의 형평성 회복을 위해 정규직 조직노동자의 단기적 물질적 이해의 양보를 감수하는 노동운동의 리더십이 필요

○ 경영계

- 경영투명성 확보와 경영정보 공유
- 후진적 노사관계 관행 개선,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청구를 자제

○ 정부

-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법·제도의 선진화, 조정 및 중재기능 강화를 통해 노동자 구속을 최소화하고 노사자치의 원칙을 확립
- 노동계 및 경영계와 다차원적인 협의 및 교섭채널을 유지하여 상호간 신뢰 구축
- 전국의 기업 및 사업장 수준에서의 노사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